

검색차단 공기관 홈페이지, 되레 해커 자극 ‘먹잇감 우려’

☞ 웹개방성은 국민 알권리
〈中〉 여전히 까딱한 웹개방성 인식
 문화재청, 웹공개로 노출 안돼
 웹개방후 사업 홍보, 인지도 제고
“해킹 우려에 국민 알권리 박탈안돼”



여전히 많은 단체가 웹개방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류 미래를 위해 웹을 개방해야 한다는 웹 창시자의 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불과 수년전까지도 홈페이지를 검색에서 완전히 노출하지 않고 있었다.
 문화재청은 국내 문화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고 정확한 문화재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민들에게는 정보를 쪼금 숨

겨놔던 셈이다.
 때문에 문화재 정보가 필요했던 국민은 문화재청이 아닌 곳에서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공정보를 취득해야만 했다.
 문화재청은 웹개방성 필요성을 알게 된 직후 홈페이지를 완전히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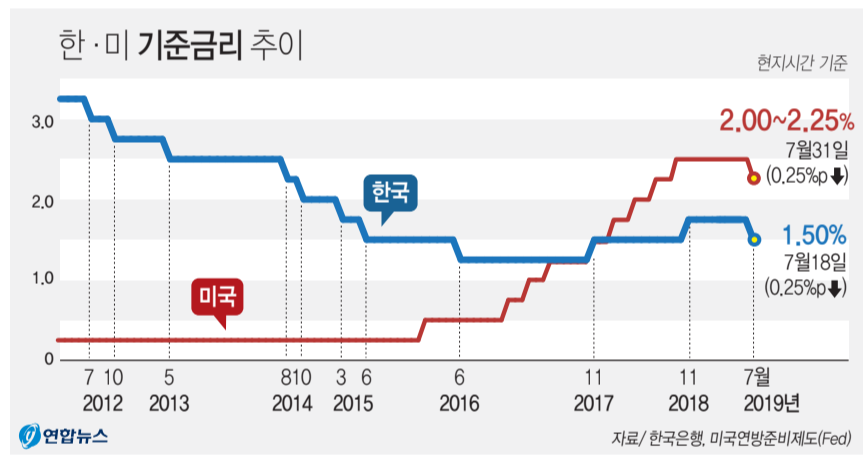
검색 포털에서 문화재청이 수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웹개방성 인증을 받은 덕분에 공공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됐을 뿐 아니라,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문화재 정보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문화재청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도 높아졌다.
 반면 웹개방성을 무시했다가 오히려 해킹을 당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개인 정보가 있는 부분에만 검색을 제한한 탓에, 해커들에 집중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일부에만 검색을 제한하고 있다가 위험성을 인지한 후, 홈페이지 전체를 검색되지 않게 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민들에게 숨겨놓고 ‘깜깜이’로 운영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웹개방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웹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다. 웹 특성상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해야만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앞장서자는 얘기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웹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 취득한 정보를 일부러 가려두면 자격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철학은 웹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의 말에서 기인했다. 웹의 발전이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보 공유를 위해 오픈플랫폼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형남 교수는 “웹개방성 필요성을 인식한 곳들은 웹을 공개한 후 여러가지 이득을 얻었다”며 “그러나 일부는 해킹 두려움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박탈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1 대외 리스크 예단 어려워...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日 수출 규제 등 전개상황 예의주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8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의 금융시장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살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



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과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글로벌 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해당 규제가 경제 외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대외 리스크요인의 전개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미·중 간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당폭 하락했다.
 5월 중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하락했던 글로벌 주가와 신항시장국

통화기조는 6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8월 들어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한은은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참가자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의 전개양상,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성장세 회복과 물가상승률 안정을 고려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2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분쟁 지속 가능성

IT로 확대... 반도체 수출·단가 ↓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경기,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화웨이 등 IT부문으로 확대된 탓에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됐고, 반도체 수출 감소와 단가 하락을 야기했다.
 8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월 -6.9% ▲5월 -9.7% ▲6월 -13.7% 등으로 점차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출물량지수도

지난해 4분기 7.0%에서 올해 ▲1~4월 -1.4% ▲5월 -3.3% ▲6월 -7.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은은 “수출물량지수 증가율,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교역조건 변화율, 미국 GDP 전망 표준편차 변화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증대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6월 글로벌 교역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물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5월 이후 IT부문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갈등은 반도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면서 반도체 수출물량 회복세를 둔화시켰다. 단가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 1월을 저점으로 반등하

던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세는 5월 중 상당폭 약화됐고, 메모리 단가 하락세도 6월 들어 심화됐다.
 한은은 “미국의 중국 기업 거래제한 등으로 글로벌 IT 관련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모리 수요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반도체 수요업체는 신규 구매보다는 보유 재고를 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반도체 단가하락 전망을 심화시키고 수요 회복을 제약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3 가계대출 증가세 다시 ‘꿈틀’

대출잔액 누증·금리 하락 상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조짐이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지난해 보다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4월 이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민간신용 증가율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8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다”면서도 “다만 4월 이후에는 주택 관련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완만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가

계대출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부동산 임대업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타 업종에 비해 큰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7.7%로 4년 전(13.2%)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민간신용 증가율(+6.0%)과 명목 GDP 증가율(+1.2%)을 상회했다.
 다만 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부 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대출 잔액이 누증돼 있는 데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 대출금리 하락 및 신규입주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증가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